

# 규제·개발 특례 '협소'… 미래 먹거리 주도권 놓치나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자치권 핵심' 결정 자율성·집행 속도 보장 조항 대구경북·충남대전 특별법보다 제한적…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미래를 설계할 특별법안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 경쟁 지역의 법안과 비교해 규제 혁신과 개발 사업권 분야에서 낮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권의 핵심인 '결정의 자율성'과 '집행의 속도'를 보장하는 조항이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전남광주법은 통합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을 디자인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면에서 가장 큰 약점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특구 지정 및 의제' 권한에서 나타난다. 대구경북특별법은 제113조(글로벌 미래특구의 지정 등)와 제114조를 통해 이른바 '매

가 특구' 권한을 명시했다.

특별시장이 직접 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교육국제화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13개 부처에 걸친 주요 특구 지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강력한 원스톱 시스템이다.

지자체가 일일이 부처별 공모에 참여하거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 전략에 맞춰 즉각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남광주법은 제124조(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나 제102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처럼 특정 산업별 지원책을 별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대구경북과 같은 통합적 의제 처리 조항이 범위

가 제한적이다 보니, 복합적인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의 개별 심의와 규제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또한 전남광주법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전남광주법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기간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법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광범위한 면제권을 담았다. 신공항 건설 및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된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망 건설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수산 분야 전반(항만 개발, 어항 정비 등)에 대해서도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즉, 대구경북은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류·관광 인프라 전체를 예타라는 장벽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춘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례의 격차'가 결국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의 차이로 직결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만큼 중요한 것이 규제로부터의 자유"라며 "대구경북이 '글로벌 특구'라는 강력한 무기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때, 전남광주는 개별 법안의 칸막이에 막혀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에 끌려 끌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 지역 수준 이상의 포괄적 특구 지정권과 SOC 사업 전반에 대한 예타 면제 권한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통합은 이루어더라도, 운영의 주도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무늬만 통합'에 그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꼭 잡는다" 강력 의지 표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버티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 유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는 올리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자 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엣트워터)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이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다주택자 눈물 끈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 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또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의 눈

물을 안타끼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응호하시는 여러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통합법 '운명의 주'  
9일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5일 상정·12일 의결

광주·전남 등 거대 광역단위 통합 논의가 국회의 입법 테이블에 올려진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 제3회의장에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법안 관련 합동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위원들이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2월 의사 일정의 핵심 분수령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 법안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는 나주·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행안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다.

현재 행안위 측은 공청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통합 모델과 특례 조항이 법안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행안위는 공청회에 앞서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관련 법안 상정과 부처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9일 공청회에서 도출된 정점 사항을 바탕으로 10일과 11일 이틀간 법안 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방통합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해당 법안의 최종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안 제2소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